

퀴바디스, 피시즈

- 평화학 편: 평화학자 5인이 답하다 -

이동기, 구갑우, 백지운, 이성용, 조영철, 주윤정

이 기획은 ‘평화들’에 대한 다양한 속고와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 질문과 대답 형식의 시리즈로 마련된다. 이 기획은 ‘평화들’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보조하기 위해 한 질문에 여러 견해와 성찰을 담는다. 이번 호는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평화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다루었다. 2호와 3호, 4호에는 각각 <평화운동>과 <평화교육> 그리고 <평화문명>을 주제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질 것이다.

이번 호에는 네 개의 질문에 평화학자 5인이 답한다: 구갑우(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백지운(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이성용(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교수), 조영철(전북대 교수), 주윤정(부산대 교수). 질문은 편집위원장 이동기(강원대 교수)가 마련했다. 5인의 평화학자들은 해당 질문을 놓고 2022년 6월 21일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주최로 좌담회를 가졌고 그 후 원고 형식의 답지를 제출했다.

이동기: 2022년 2월 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구촌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2년 넘게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적지 않은 평화학자들이 향후에는 기후나 생태 위기 내지 그것과 유사한 종류의 글로벌 재난이 날을 갈등이나 적대적 긴장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 갈등의 초국화(transnationalization)와 생태적 전환의 필요에 직면해 글로벌 거버넌스와 트랜스내셔널 공생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인습적인 안보 갈등과 전통적인 국민국가 간 영토 분쟁 및 패권 대결의 격화를 맞이하도록 했다. 대만과 한반도를 비롯한 일부 아시아 지역도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전쟁과 적대,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21세기 전반의 이 ‘평화 부재’ 상태에 직면해 평화학이 어떤 학문적 지평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전통적인 의미의 ‘비판적 평화연구’ 내지 ‘적극적 평화’ 지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21세기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평화학의 목표와 성격 및 내용을 (어떻게) 새롭게 규정해야 할까?

구갑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란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발생한 전쟁은 평화연구의 정체성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평화연구가 평화의 소망만을 되뇌어서는 안 되는 현실의 도래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날 연쇄 전쟁의 예고편일 수 있다. 특히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는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분쟁지대(hot spot)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첫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측되었음에도 평화운동은 2003년 2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전야처럼 반전(反戰)을 위해 봉기하지 않았다. 지구 시민 사회의 형성을 알린 신호였던 2003년 2월 평화운동의 국제연대는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소멸한 것인가, 평화연구는 ‘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야에 국제적 반전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평화운동의 국제연대야말로 평화적 방법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평화운동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막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그것은 평화 지향적 시민의식의 제고에 기여했다.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시대에 평화운동의 국제연대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은 평화운동으로서의 평화연구에 주어진 절박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둘째, 전쟁의 원인을 밝히는 평화연구의 고전적 주제를 다시금 천착해야 하는 시점이다. 원인을 알면 평화에 이르는 해법도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원인을 붙들게 된다면, 평화연구 내에서 원인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소련의 일원이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역사적 원인(遠因)을 고려하게 한다. 현재적 시각에서 직접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는 다자 군사동맹인 나토(NATO)의 러시아 국경 근처로의 동진(eastward expansion)을, 우크라이나에 대해 안보지원을 수행하며 간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은 소련 제국을 부활하려는 러시아의 의도를 각각 전쟁의 원인으로 생각한다. 우크라이나 현 정권의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반(反)러시아, 친(親)서방 외교정책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에 한 몫을 했다. 전쟁의 원인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지만, 당파적일지라도 평화연구의 간결한(parsimonious) 원인 제시는 평화운동이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 즉 정화(ceasefire)에서 상호 합의에 의한 정전(armistice) 그리고 지속가능한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초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의 개념에 대해 재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21세기 전반기에 등장한 영토 확장과 영토 보전을 둘러싼 전쟁이 ‘기후-생태 복합위기’(조효제, 2022,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파주: 창비)의 극복을 평화연구에 접목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의 극복을 ‘적극적 평화’로 정의했던 비판적 평화연구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자연의 일부로 인간을 위치지우며 ‘자연의 권리’를 ‘적극적 평화’의 개념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전쟁은 제노사이드(genocide)는 물론 에코사이드(ecocide)를 야기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영화된 세계의 대립이 폭력적으로 표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유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공급망을 둘러싼 진영 전쟁으로 비화되며, 미국 진영은 탄소중립보다 화석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전쟁이 야기하는 기후-생태 복합위기는 심화될 것이고, 기후-생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부차적 과제로 전락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효과가 있다. 평화협정(peace agreement)과 같은 제도를 통해 평화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의가 생길 수 있다. 평화연구는 인간의 행동을 제도로 강제하려는 시도로 평화협정과 같은 방식의 합의를 제안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약속했던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평화를 만들려 했던 2015년의 ‘민스크 II 협정’ 등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보았다. 군축이나 방어적 방어를 위한 군대의 후방 배치와 같은 실질적 국가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한, 평화협정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일 뿐이다. 전쟁(warfare)에 소용되는 비용을 복지(welfare)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적극적 평화’의 관념이 작동할 때, 전쟁이 없는 상태로로서의 ‘소극적 평화’도 가능하다는 교훈을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얻고 있다.

백지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에서 고조되는 긴장 상황은 냉전 이래의 ‘긴 평화(long peace)’라는 통념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돌이켜보면, 냉전시대를 ‘긴 평화’로 보거나 탈냉전시대를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부르는 것에는 서구 중심 혹은 강대국 중심의 사고가 전제되어 있었다. 비서구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냉전(Cold War)’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냉전으로 불렸던 시기 아시아에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인도네시아의 화인 제노사이드,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이르기까지 참혹한 전쟁과 국가폭력이 휩쓸고 지나갔다. 지금까지도 지구 곳곳에서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폭력과 갈등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냉전 혹은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복잡한 역사적 연원을 지니고 있다. 세계는 아직도 제국주의와 냉전시대 강대국의 싸움이 남긴 폭력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강대국의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라는 지배적인 관념이 실상은 얼마나 허약하고 또 허위적인 것인지 실감하게 된다.

지구 서쪽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서구의 모순이 충돌하는 장소라면, 동쪽에서 대만은 미국과 중국의 오랜 대결의 장이었다. 냉전과 탈냉전 시기 미국과 중국은 민감한 대만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방향을 암묵적으로 공유해 왔다. 그러나 미중의 오랜 적대적 공조체제가 균열하여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지금, 대만의 운명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롭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세계의 불안한 이목은 대만해협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술전쟁, 정보전쟁을 핵으로 하는 지금의 미중대결 구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대만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가치는 냉전시대에 비할 바 아니다.

한반도는 러시아와 유럽(미국),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두 태풍 사이에 놓여 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강대국간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전쟁은 강대국이 아니라 그 갈등과 모순이 응집된 제3의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그러한 문제적 장소 중의 하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강대국간 힘의 균형에 의지하는 안보평화론이 주류적 의식을 점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말한 ‘소극적 평화’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의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안보평화의 개념으로는 물리적 폭력을 방지하기도 부

죽해 보인다.

과거보다 문명적·문화적으로 진보했지만 물리적 전쟁 위협이 오히려 증대한 최근의 상황은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라는 관념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의 자장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평화란 필경 적극적 평화에 관한 사유여야 한다. 만약 평화가 전쟁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면, 과연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을 제거하려는 근본적인 노력 없이 물리적 폭력만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할까?. 문화적 폭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평화의 사유는 국가 간 평화뿐 아니라 사회, 계층, 성별, 나아가 환경과 생태에서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 방식을 수립하는 노력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평화학의 사유에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생태나 환경에 대한 의제는 단계적인 것도 아니고 영역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평화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나 트랜스내셔널 공생 네트워크는 반드시 생태나 기후 차원에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동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정치 군사적 차원의 협력일 뿐 아니라 반도체 동맹으로 집약되는 경제협력이자 기술정보 및 에너지 협력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탄소제로 정책이 보여주듯, 석탄 에너지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 발굴의 문제는 글로벌 이슈이면서 또 일국의 경제발전과 안보 영역에서도 사활을 건 과제이다. 그렇게 보면, 트랜스내셔널 공생 네트워크는 생태와 기후라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모델이 아닐까. 21세기 평화학의 모색에서도 이 변화하는 지형을 읽어내고 참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성용: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 온 코로나 팬데믹과 그로 인해 야기된 여러 정치사회적 문제들은 그 규모와 속도의 측면에서 과거의 사건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도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았고, 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무력 행동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적극적 군사지원으로 맞서는 국제전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탈식민지 국가들의 내전이 주류를 이루던 국제 분쟁 흐름과는

질적으로 다른 면모를 보인다. 변화하는 분쟁과 위기의 동학(dynamics)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평화학의 중장기적 목표와 역할의 관점에서 최근의 문제들을 대할 때 ‘각 사안이 갖는 본질들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여러 정치사회 문제들을 살펴보자.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증오, 그 대응으로 진행된 백신 보급에서 많은 개발도상국이 소외된 현실, 운송과 물류의 급격한 감소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영역 중 하나가 인도주의 활동이었다는 점 등은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사안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새로운 것인가? 질병의 대유행은 이미 여러 차례 큰 충격을 주었다. 최근 사례만 들어도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MERS) 등을 기억할 것이다. 백신과 식량을 비롯한 보건-건강 필수 재화의 불공평한 분배 문제 역시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WFP, WHO 등과 같은 관련 기구들에 의해 그 심각성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각 사안의 본질이 달라진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일부 국가-지역에 집중적으로 표출되던 문제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즉 규모의 차이로 인해 더 큰 주목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은 지구상 모든 인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강하게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 평화-개발 활동을 위한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추동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충격이 클수록 사람들의 대응도 절실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백신의 불평등한 보급으로 제때 유행병의 예방을 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지속적으로 변이가 발생하여 팬데믹의 종식이 한없이 늦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모든 국가들의 협력적 공동 대응이 절실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완전하나마 국제 백신 보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같은 실질적 공동대응의 단초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질문에 답하면, 기존의 ‘적극적 평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성(reciprocity)과 연계성(inter-being)에 주목하는 평화 접근법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 후반 ‘적극적 평화’ 개념이 본격적으로 제안된 이래 이와 관련한 개념

적, 이론적 담론은 크게 발전했지만, 평화학 주류 학계에서 앞서 언급한 상호성과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1990년대 중반 이후, 적어도 평화 구축 (peace-building)과 관련해 이루어진 ‘적극적 평화’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한 사회가 보여주는 ‘상황적(situational) 양태’를 분석하는 틀의 관점에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 지역에 존재하는 연계성과 상호성에 대한 사상적 체계를 접목하여 ‘적극적 평화’의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한다면, 현재 발생 중인 지구적 규모의 재난과 분쟁 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활동들의 성격과 방법적 특징을 잘 담아내는 새로운 개념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조영철: 나는 ‘물리적 폭력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평화학 연구자는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국제관계이론과 지식생산의 정치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로서 학계와 실제 정치에서 평화가 어떠한 방식들로 이해되고 누구와 무엇을 위해 (재)생산 및 소비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화와 관련된 지식의 구성, 소비 및 해체 과정에서 표출되는 윤리적,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는 비판 국제관계연구(critical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를 종종 진행해 왔다.

최근의 인간들 간 폭력 갈등과 인간과 자연 사이에 발생한 위기를 보면서 원자론적 존재론(atomic ontology)에 바탕을 둔 서구적 근대성의 무제한적이고 무비판적인 확장이 한계치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원자론적 존재론에서 주체(개인, 인간, 자아)는 타자 및 자연과 분리되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세상의 주인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주인들은 자신의 가치가 올바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이라고 인지한다. 여기서 주인이 믿는 보편적 가치는 우월한 가치로 상정되며, 자신의 우월성을 믿는 주인은 타자와 자연을 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정복과 동화의 논리에 기반을 둔 행위를 취한다. 예를 들면, 자연을 정복(개발)의 대상으로 인지하는 인간중심적 기술문명의 무비판적 확장은 기후 및 환경문제, 코로나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현재 자연의 위기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다. 인간이 촉발한 자연의 역습은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나 집단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최근 코로나 대유행의 경우에서 보듯이, 코로나는 단지 전 지구적 보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미 전략경쟁 관계 속에서 국제정치적 문제로 대두되며 이

용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문제로까지 전이되고 있다.

현존하는 주권 국가 중심의 베스트팔렌 국제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원자론적 존재론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베스트팔렌 국제체제와 자본주의를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체제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들의 삶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체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베스트팔렌 국제체제와 자본주의도 흔히 원자론적 존재론에 기반해 이해되며, 두 체제 모두 자아와 타자의 윤리적 관계성 구축보다는 명확한 구별 짓기와 자아 이익의 극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통해 자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소유욕을 확장시키며, 타자에 대한 정복과 동화를 시도한다. 베스트팔렌 국제체제와 자본주의의 글로벌 확장에서 나타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는 역사 속의 한 사례일 뿐이다. 공식적인 식민주의/제국주의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 부정적인 유산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원자론적 존재론에 기반한 서구적 근대성이 인류 문명의 진보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서구적 근대성의 맹목적 추구에서 나오는 어두운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연과 타자를 자아(주인)의 기술적 통제 하에 두고자 하는 근대적 자아중심주의는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자아에 대한 성찰성과 비판성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평화학은 원자론적 존재론의 사고와 행위의 극단화를 경계하면서, 관계론적 존재론(relational ontology)과 일상 속 평화체험을 위한 실천적 사유를 요청하고 있다.

‘평화부재’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평화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나는 평화를 하나의 목적, 최종 종착지, 또는 획득되어야 할 객체(thing)로 보지 않는다. 평화는 저 밖에 존재하며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다. 평화를 과정, 생성, 태도, 수행성, 일상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화는 일시적으로 성취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평화는 명사이기보다는 동사이자 형용사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인간이 초래한 여러 위기들과 관련하여 평화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행위가 요구된다. 한나 아렌트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행하는가를 사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유를 통해서 (인간 및 비인간 모두를 포함하는) 개별

주체들 간 평화로운 일상과 관계성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긴 호흡으로 볼 때 현존하는 체제 내에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온 차별, 적대, 배제, 폭력 등에 대한 변혁을 추구하는 비판적 평화연구의 유효성은 살아 있다고 본다. 비판적 평화연구는 우리에게 다르게 사유하고 새롭게 상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이는 기존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변혁할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비판적 평화연구는 여전히 일상 속의 평화 수행보다는 체제 수준에서의 비판과 해체라는 거시적 관점에 치우친 점이 있다. 거시적 수준의 비판성을 잃지 않은 채 미시적 수준에서 개별 주체들의 평화 실천과 그들 간의 윤리적 관계성 구성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주요정: 현재의 갈등은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 단위의 갈등, 사회 단위의 갈등 자체도 격화되고 있지만 그동안 비가시화되었던 자연-인간의 갈등과 전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인간 문명이 지질학적 행위자 수준이 되어 지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다양한 차원에서 이를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런 새로운 흐름은 다소 정체될 수 있다. 현재의 전쟁, 갈등은 인간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앞으로 군비 경쟁 등이 강화되면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써야 할 복지비용, 그리고 기후위기/생태위기 대응 전환 비용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복지와 에너지 전환/생태적 사회로의 전환이 무모한 군비경쟁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욱 중요한 일임을 알리는 논리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에 평화학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동기: 국내 평화연구는 그 동안 주로 한반도 분단 이해와 통일 전망에 매달렸다. 남북한 화해협력의 지체와 통일 전망의 부재 현실은 한국의 평화연구를 크게 규정했다. 그것은 분단 현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평화

연구의 발전을 제약한 측면도 있다. 국내 평화연구는 한반도를 넘는 인식 지평이 부족했고, 글로벌 차원의 갈등과 분쟁 연구도 충분하지 않았다. 게다가 식민폭력과 국가폭력 연구 및 사회 내부의 혐오와 갈등 문제도 평화연구의 중요한 일부지만 남북관계나 통일 논의에 비하면 관심이 부족하다.

지난 시기 한국의 평화연구에서 대북정책과 통일전망 논의가 가졌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향후 국내 평화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론이나 관점 또는 주제나 대상 등에서 어떤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주목하거나 추진하고픈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나 연구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가?

조영철: 6.25 이후 대한민국의 대북 및 통일 정책은 국가 중심의 전통적 안보 연구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전통적 안보 연구에서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라는 세 개의 대표적인 이론적 틀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론들에서 타자는 종종 위험한 혹은 위험할 수 있는 존재로 전제되었다. 타자를 다룸에 있어서 현실주의는 타자를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데, 자유주의는 타자를 자아와 같이 동화시키는 데, 구성주의는 타자를 자아가 만든 규칙에 따르도록 사회화시키는 데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정복과 동화/사회화의 과정은 상황과 이슈에 따라 독립적 혹은 혼합적으로 행사된다. 정복과 동화/사회화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주로 강자가 약자를 다루는 방식이며, 위의 세 가지 이론은 강자의 이익에 복무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패권적 강자의 이론을 내재화한 약자는 강자를 따르는 것을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길로 인식하고, 강자와 같이 되기를 갈망한다. 한국의 안보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90% 이상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위의 세 가지 관점 속에서 북한과 대북정책을 논의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은 정복 혹은 동화/사회화의 대상으로 고착되는 경향성을 가지며, 이는 종종 대북정책과 한국외교에 있어서 상상력의 빈곤으로 귀결된다.

저의 전공분야인 국제정치학에서는 위와 같은 전통적 안보연구 지식생산의 환경 속에서 평화연구가 진행되었다. 평화연구는 안보연구의 하위분야에 위치해 있었고 그 학문적, 정책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더군다나 ‘평화’라는 용어가 오용 혹은 남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국제정치학에서 냉전은 종종 ‘긴 평화’(long peace) 혹은 ‘핵 평화’(nuclear peace)라는 용어로 기술되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냉전은 차가운 전쟁이 아니라 피를 흘린 프

거운 전쟁이자 실제적 폭력이었다. 학문적 지식이라는 미명 하에, 냉전이라는 폭력의 일상화 과정에도 ‘평화’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전통적인 안보연구에서는 패권적 강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만 부재하다면 폭력과 적대에도 ‘평화’라는 외피가 부여되었는데, 이처럼 강자 주도의 국제질서 안정(stability) 상태를 평화와 동의어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국제정치학보다는 인문학 바탕의 학자들이 한반도 혹은 동북아의 덜 적대적이고, 더 연대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연구를 더 활발히 해 왔다고 평가한다.

국제정치학 혹은 안보 연구의 경계를 뛰어넘는 한국 내 평화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이 생산되었고, 이것들이 현실과 대중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더 이상 ‘적대’라는 단선적 관점에서만 이해되고 있지 않으며, 통일도 하나의 주권 국가 설립이라는 점에서만 이해되고 있지 않다. 국내 평화연구 발전과 관련하여 이미 이론과 연구 주제의 다변화(불평등, 민주주의 역행, 종교, 이민, 젠더, 인종, 식민주의/제국주의, 정체성, 환경, 감정, 기억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다양화 과정이 그동안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간과되거나 은폐된 폭력을 드러낸다. 그리고 우리들이 더 깊고 넓게 사고할 수 있게 하면서 좀 더 평화로운 일상을 수행하게 한다.

구갑우: 한반도에서 서양어 ‘peace’의 번역어인 국제정치적 용어 ‘평화’(平和)란 개념은 수입품이었다(하영선, 2009. “근대한국의 평화 개념 도입사.” 하영선 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파주: 창비). 18세기 경 서구에서 근대 국민국가들 간 전쟁이 없는 상태를 지시하는 개념으로 변용된 평화라는 개념은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대자소(事大字小)를 규범으로 하는 중국적 세계질서 속에 위치했던 한반도에서 국민국가들 사이의 합의인 국제법 또는 협력인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동아시아에서 ‘peace’는 최초 미국의 국제법 학자 헨리 휘튼(Henry Wheaton)의 1863년 저서 『국제법 요강』(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의 1864년 중국어 번역본인 『만국공법』(萬國公法)에서 ‘화평’(和平)으로 번역되었다. 1868년 『만국공법』의 일본어판에서는 peace가 ‘평화’(平和)로 번역되었다. 한반도에는 일본식 번역이 수입되었다. 1895년 2월 12일 고종실록(高宗實錄)에 1894년 중국적 세계질서의 종언을 알린 청일전쟁(淸日戰爭)이 “일본국”(日

本國)이 “동양의 큰 형국의 평화(平和)를 유지하려는 뜻”이었다는 구절에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평화가 등장한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같은 해 5월 23일 고종실록에는 국제법에 기초한 평화인 “일청평화조약”(日淸平和條約)의 체결을 알리는 기록이 있다.

조선말과 식민 시대에 평화에 이르는 방법으로 자강(自強), 균세(均勢), 전쟁 등을 생각하는 ‘힘을 통한 평화관’이 주류를 형성했다. 그러나 한중일의 ‘주권의 상호인정’에 기초한 다자적 협력을 통해 동양 진영 내부의 평화의 길을 제시했던 1910년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1차 세계대전의 반성으로 국제연맹이 설립된 이후이고 한반도에서 1919년 3·1운동 직후였던 시점인 1920년 9월 “새봄”이란 저자가 『개벽(開闢)』에 발표한 “칸트의 영원평화론(永遠平和論)을 독(讀)함”은, 힘을 통한 평화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담론들이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분단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담론의 장에 다시금 진입했다. 1953년 7월 한국전쟁을 상호 합의에 의해 중단하는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정전은 미국의 내전인 남북전쟁(1861-1865) 시기에 만들어진 근대적 의미의 전쟁법인 리버코드(Lieber Code)에 등장한 개념으로, 부분적 또는 일시적 평화도 아닌 상태였다. 따라서 정전협정은 평화의 길을 그 안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 정전협정 4조 60항이 그것이다.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고위급 정치회의(political conference)를 열어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해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정전협정의 조항이다(구갑우, 2021.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한국과 국제정치』 37권 2호, 253-285). 정전협정 62조는 정전협정이 “적정한 협정”, 즉 평화협정에 의해 교체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반도 정전협정은 불가피하게 한반도 평화 과정(peace process)을 지시했다. 그러나 냉전 시대에 평화와 평화 협정은 의제가 아니었다. 평화가 필요한 곳에 평화운동과 평화연구가 없었던 것도 한몫 했다. 정전협정은 한국전쟁과 같은 전면전을 예방하는 합의였지만, 서로에게 적의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기제였다. 냉전 시대의 한반도는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안보가 약화되는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가 일상화된

공간이었다.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특이성도 주목의 대상이다. 첫째, 식민시대에는 단일한 실체였지만, 탈식민 시대에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된 상태에서 하나의 국가 만들기, 즉 통일을 지향할 때, 전쟁과 같은 폭력적 방법으로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고자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한반도 안보딜레마는 초기부터 핵무기와 연계되었다. 1950년대 말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무기 배치,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시도, 탈냉전시대 북한의 핵국가 되기 등은 한반도 안보딜레마를 시동하고 가속화한 사건들이었다. 셋째, 남한은 미국과 북한은 소련, 중국과 동맹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외적 세력균형 정책을 선택했다.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행위자가 남북한으로 한정되지 않는 이유다.

탈냉전시대의 도래로 한반도 안보딜레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냉전시대에는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이란 의제를 선점했지만, 탈냉전시대와 함께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는 평화체제를 의제화 했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대북정책은,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 방식의 배제를 전제로 할 때 실현가능한 것이었다. 남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에 합의했고, 유엔 동시가입으로 남북관계는 국제관계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남북한의 교차승인이 한소, 한중수교는 있지만 북미, 북일수교는 없는 비대칭성을 띠게 되면서 북한발 핵문제가 발생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탈냉전시대 한반도 안보딜레마는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의 증강 대 한미동맹 강화 더하기 남한의 자주국방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탈냉전시대에 남북한이 모두 평화의 의제화에 동의했지만, 평화의 개념과 평화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남한이 군비 증강과 같은 군사적 방법과 경제협력에서 정치군사적 협력으로 파급되는 기능주의적 방법을 선호했다면, 북한은 남한과 같은 군사적 방법과 더불어 정치군사적 문제의 선차적 해결 이후 경제·사회·문화영역으로의 파급을 구상하는 연방주의적 방법을 주장해 왔다. 남북관계는 기능주의적 접근 대 연방주의적 접근의 충돌의 역사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 과정의 반복적 시동의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정전협정 4조 60항의 외국군 철수 의제의 축소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차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평화개념에서는 사회주의의 확산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특유의 적극적 평화관과 폭력적 방법에 의한 평화실현에 대한 긍정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남북한의

평화 개념을 둘러싼 공방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에 대한 번역과 통역이 필요하다.

평화연구의 역할은 한반도에서 평화 개념과 평화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의 중재다. 고질적 갈등을 안고 있는 분쟁지역에 대한 비교평화과정 연구(Tonge, J. 2014. *Comparative Peace Processes*. Cambridge: Polity)는, 평화 ‘개념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갈등해결 기술과 관련하여 2018년 한반도 평화과정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재자’의 형태와 역할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다. 갈등의 해결이나 관리가 아닌 전환(transformation)을 사고한다면, 그 과정에서 ‘미래의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됨을 알게 된다.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남북한은 물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행위자들이 한반도의 중단기 미래에 대해 합의를 만들어냈는지 의문이다. 미래의 기억을 만드는 작업 속에서 행위자들의 정체성도 함께 같이 변하게 된다.

주요정: 평화연구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 사회과학의 기본적 패러다임은 인간중심적 성장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성장을 둘러싼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신화는 이미 깨졌고, 성장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내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주의 발전 동원 전략을 채택하기 일쑤다. 한 예로 현재 수도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 정책이 등장하는데, 이런 지역균형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신공항 건설이다.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생태/환경운동을 수도권의 엘리트 방식으로 치부하고, 신공항 건설이 지역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가 진보학계에서도 존재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의 사례를 보면, 이곳은 낙동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시베리아와 일본 사이를 오가는 수십만 마리 철새들의 이동경로이다. 4대강으로 인해 낙동강이 황폐화되면서 철새들의 이동경로가 상당히 변화했음에도 낙동강은 여전히 중요한데, 여기에 공항이 들어선다면 이곳을 거점 삼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재앙이자 멸종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곳을 찾는 철새들은 동아시아, 멸종은 호주 지역까지 오가는 권역에 있는 새들이다.

가덕도는 더욱이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로 부산 신행과 더

불어 가덕도의 신공항의 건설은 ‘에코사이드’라 불릴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균형이라는 인간 내 불평등 문제만을 해소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이라는 토건적 근대주의를 유지한다면 다양한 존재들과의 평화는 불가능하다. 인간 너머 존재들과 더불어 평화에 대한 상상력, 서사,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이런 인간 너머의 평화를 지향하는 생태운동의 흐름이 존재하기에 이를 평화학의 문제의식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성장 없는 번영의 평화, 인간 너머 평화 (peace and prosperity without growth, more than human peace) 등 다른 차원의 평화에 대한 개념화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평화연구에서 한반도의 생태가 본격적으로 연구의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철새들은 시베리아와 일본 큐슈, 멀리서 호주까지를 한반도를 거쳐 이동한다. 생명다양성의 차원에서 이 지역의 멸종 위기종 등을 지역 차원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전염병 등은 공동의 위협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는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생활 영역(zone)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인간 너머의 관점에서 평화학과 평화운동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에서 기지 반대운동, 신공항 반대운동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대추리 등에서 시작된 운동은 강정, 성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신공항 반대 운동으로까지 이어진다. 강정은 해군기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활동가들은 그곳에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의 주축으로 역할하면서 평화운동과 생태운동이 결합했다. 제주도에서 돌고래 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 조약골 역시 강정에서 생태운동을 시작했다. 군 기지 건설은 인간에게도 평화의 파괴이지만, 생태 자체에도 상당한 폭력을 야기한다. 전국의 평화운동을 인간 너머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와 평화학이 연대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백지운: 한국의 평화연구가 한반도의 분단 이해와 통일 전망에 매몰되어 평화학의 발전을 제약한 것 아니냐는 질문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뭇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평화 혹은 평화학의 의제는 자신이 처해 있는 로컬의 특수한 경험이나 위기 의식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아젠다

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독일과 아일랜드처럼 평화연구의 전통이 두터운 곳도 그런 사례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분단과 통일에 관한 연구와 담론이 로컬리티를 넘어 보편적 의제로서의 평화학과 만나는 데 많은 제약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바깥의 폭력이나 분쟁 경험과 소통하고 대화하려는 시도도 제한적이고, 내부적으로도 이질적인 목소리가 개입할 여지가 매우 적다. 즉, 한국사회의 분단이나 통일 논의는 매우 동일자적이고 독백적이어서 이질적 경험을 지니는 타자와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좁다. 세대가 내려가면서 통일 논의가 한국사회 안에서조차 고립되어 가는 것도 이러한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반도의 문제를 독백적 담론에서 관계적/대화적 담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통일담론이 한반도의 특수주의를 넘어 인류 보편의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이나 분석적 층위뿐 아니라 정서적, 감정적 층위에서 일국주의적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한반도의 구성원에게만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성을 얻기 어렵다. 통일이 평화라는 보편적 의제와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한반도 바깥의 이웃나라, 나아가 인류 전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의제가 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로컬 담론으로서도 존립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점점 더 고립될 것이다.

이 문제를 반추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에 기고했던 글의 한 문장을 같이 읽어보고 싶다.

그동안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일은 한국의 국민들이 휴전선 그 너머를 더 이상 상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철도를 깔고, 물류를 이동시키고, 사람을 오가게 한다면, 한국은 ‘섬’이 아닌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상력이 넓어진다는 것은 곧 이념에서 해방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상상력도, 삶의 영역도, 생각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져서 그동안 아프게 감내해야 했던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함의 위대함 -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멋진 제목의 이 글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대한 대한민국의 한 세대의 정동을 응축한, 그야말로 많은 토론을 요구하는 텍스트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특정 시대를 살았던 세대에게는, 찬성하든 아니든, 이 글이 제시하는 비전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

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모종의 정동적 감응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좀 더 냉철하게, 특히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평화라는 보편적 의제와 만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위의 구절을 곱씹어보면, 어떤 함정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곧, 그동안 한국의 통일 담론은 통일이 한반도에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에 집중했을 뿐,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이 타자에게, 세계에, 인류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통일된 한반도가 남과 북을 물질적·정신적으로 부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약속은 북한은 물론 남한 사회 내부에서도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또 하나의 정부 슬로건 이상이 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참조를 얻을 수 있다. 2014년 해바라기운동에서 가시화되었던 양안위기는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통한 평화 배당이라는 유인이 양안(兩岸) 간 마음의 거리를 오히려 한층 더 벌려 놓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통일’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층위인지 논의를 세분화하고 현실화하는 문제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 논의가 평화라는 보편적 의제와 만나기 위해서는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를 어떻게 더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러한 노력의 과정이 갈등과 대결, 폭력과 전쟁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동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세계에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우리가 속한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한반도의 남과 북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을 진지하게 내부에 포함할 때 한반도의 통일 담론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독백적 평화에서 관계와 대화의 평화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주제는 한국전쟁이다.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동아시아의 냉전체제, 그리고 미중대결이라는 형성 중인 체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은 오늘날 복수적 층위에서의 갈등과 모순의 역사적 원점이다. 남과 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십여 개의 국가가 참전하여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수백만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70년이 지났지만 한국전쟁은 아직도 냉전시대의 이념적 굴레에 갇혀 있다. 당시 적으로 싸웠던 ‘그들’에게 이 전쟁은 무엇이었고 또 지난 70여 년간 그들의 후손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이 전쟁을 기억하거나 혹은 망각했는지 등을 우리

는 거의 알지 못한다. 국가 차원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정서의 차원에서 이 전쟁이 ‘그들’과 ‘우리’에게 남긴 역사의 유산을 서로 교차적으로 돌아보는 상호적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전쟁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각자의 독백을 넘어 타자들의 이질적이고 불편한 기억들 속으로 침투하는 대화가 형성될 때,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와 ‘그들’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작은 여지라도 마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화해와 평화를 논하는 한 가닥의 두서가 손에 쥐어질 것이다.

이성용: 한반도 평화에서 남북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평화 관련 논의가 이 주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만 한국 학계에서 이 주제에 대한 주목도가 너무 커서 평화와 관련한 그 외의 담론과 관점이 설 자리가 무척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 담론 영역은 여러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크게 기존의 의제에 관한 분석의 틀을 확대하는 방향과 기존에 소외되어 온 주제를 논의하는 방향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남북한 의 평화’에 대한 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의 경우, 미국과 중국을 지렛대로 삼은 기존의 외교중심 접근법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여러 접근법들은 이미 충분히 연구되었고, 최근 나온 연구 결과물들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 이미 나온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외교와 더불어 추진해 볼 수 있는 여러 방식들이 이미 기존 평화학계의 논의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맥락에 적극적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새로운 함의를 줄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생산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가령 평화학계의 실증적 연구자들에 의해 전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변화를 추동해낸 사례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국가 혹은 국가 실패(state failure)에 당면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동시에 외부의 개입을 통해 성공적 변화를 이루어낸 사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들이 제시하는 실천적 함의를 한반도 상황에 접목하여 집중 분석할 때, 북한과 같은 폐쇄적 권위주의 정부를 다루는 접근법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예로,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환기 거버넌스 구조’ 및 프로세스의 안착 이후 맞이하게 될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 상태’에 대한 북한주민/탈북자 인식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동안 탈북자의 인식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그들의 한국사회 인식-적응 경험을 알아보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남북한의 통합을 구상하면서 그 상대방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둘째, 평화연구 주제의 확장과 관련하여 새로이 주목할 가치가 있는 주제는 정말 많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평화 구축(peace-building)과 관련해 몇 가지만 언급하면, (1) 한국의 국제 평화활동의 특징, 기여점 및 한계, (2) 지역(local) 단위에서 존재하는 갈등 해결, 평화 조성 활동 및 메커니즘에 대한 종합적 연구, (3) 한국 사회에 정착한 해외 이주민들의 일상적 평화의 성격 연구 등이 있다.

이동기: 이 잡지의 제호는 『평화들 PEACES』이다. ‘평화들’은 평화가 보편적 단일 규범이나 확정된 하나의 체제로 존재하기가 어려움을 전제하면서 평화로 가는 여러 길들을 지시한다. 게다가 그것은 평화 수행 주체와 단위들의 다원성과 평화 관념과 구상의 이질성을 중심에 세웁니다.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평화학자 볼프강 디트리히(Wolfgang Dietrich)는 ‘많은 평화들’(many peaces)이라 말했고,¹⁾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출신 학자들이 ‘평화들’과 ‘평화다원주의’ 개념을 제시했다.²⁾ ‘평화들’의 관점은 평화 부재(peacelessness)의 복합성과 평화 형성의 다원성에 대한 개방적 관심을 넘어 평화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평화연구가 학제적, 융합적 성격을 가짐을 함축하기도 한다. 평화 다원주의

1) Dietrich, Wolfgang. 2021. *Der die das Frieden. Nachbemerkung zur Trilogie über die vielen Frieden*. Wiesbaden: Springer VS; Dietrich, Wolfgang. 2008. *Variationen über die vielen Frieden Band 1: Deutungen*. Wiesbaden: Springer VS; Dietrich, Wolfgang. 1998. “Plädoyer für die vielen Frieden.” Dietrich, Wolfgang, Johan Galtung and Marianne Gornemeyer eds. *Is Small Beautiful? Die Leopold Kohn Vorlesungen*. Wien; Dietrich, Wolfgang and Wolfgang Sützl. 1997. *A Call for Many Peaces*. Peace Center Burg Schlaining.

2) 이동기. 2013.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 아카넷, 15; 이찬수. 2016. 『평화와 평화들 -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서울: 모시는 사람들; 이찬수 외. 2020. 『세계평화개념사 - 인류의 평화, 그 거대담론의 역사』. 고양: 인간사랑; 김성철, 이찬수 편. 2020.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아울러 자유주의 평화론을 넘는 여러 관점과 주제들, 즉 젠더 관점과 생태주의, 탈식민주의와 트랜스내셔널리즘, 로컬과 일상 등을 포괄하는 평화연구의 발전을 위해 제언을 바란다.

이성용: 평화 다원주의에 접근할 때 항상 논의의 출발점은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혹은 ‘누구의 관점에서 본 평화인가?’라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사회의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관점들 중 우리가 처한 맥락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 평화와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원론적이거나 규범적인 담론에 그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 출발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의 다원주의 관련 논의에서 제가 새삼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다원주의에 접근하는 학자들의 관점이었다. 제가 그동안 접해 온 평화 관련 논의에서는 다원주의가 존중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회적 약자들(minority)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따라서 다원주의와 관련한 논의는 ‘현재 사회 담론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이들에게 절실한 문제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로 끝난다. 그리고 학자들 스스로가 주류의 일원임을 자각함으로써 ‘비주류’의 입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나 현상을 해석하는 문제에 더욱 조심해 다가가려 한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다원주의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다 보면, 상당수는 ‘주류(majority) 내부의 다양성’을 부각시키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가령 통일 관련 논의와 사회적 어젠다에 관한 연구 등에서 주요 계층 혹은 집단 사이의 인식 차이에 주목하고 이들 주요 계층의 인식과 요구에 더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 같다. 물론 이런 연구도 무척 중요하지만, 다양성에 관한 연구 방향이 이런 관점에서만 정해질 경우 ‘다수’의 인식과 이해관계를 통해 한국 사회 평화의 면면이 일반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한국 사회 다수의 생각이 지배적 내러티브로 정착할 경우, 그 내러티브가 그 사회의 유일한 진실 혹은 정의로 절대시될 위험이 있다. 이는 각 사안마다 존재하는 상대의 생각을 배제하는 경향을 낳게 되고, ‘상호성’의 평화 활동을 어렵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평화의 모습을 탐구할 수 있는 접근법에 대해 내적 고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경합적 다원주의(agonistic pluralism)처럼 소수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이론들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경합적 다원주의의 내용을 한두 줄의 설명으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 핵심은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 사이의 입장과 관점에는 양립하기 힘든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구성원들이 경쟁적이고 갈등적 관계에 놓이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또한 각종 정치 담론에서 토론과 심의를 통해 상이한 논점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결국 소수 의견의 억압과 배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경쟁하며 사회의 견해들이 발전 및 변화하는 과정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합적 다원주의 외에도 현재 평화학계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적-이론적 주제들 중 상당수는 일견 사회적 약자로 보이는 이들의 역량을 재평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표면위로 올려놓으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한국의 다원주의적 평화 담론에서 좀 더 폭넓게 반영되기를 바란다.

주요장: 평화학의 논의가 학문적으로 더 발전하려면 이론적 혁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성용 교수와 강혁민 박사가 국내에서 일부 소개한 경합적 평화(agonistic peace)(강혁민, 2022, “경합적 평화론의 한반도 평화구축에의 함의: 경합적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담론 201』 25(1), 79-111), 윌리엄 코놀리(William Connolly) 등의 다원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논의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소개되면 좋겠다. 또한 최근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 등을 위시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코스모폴리틱스(Cosmopolitics)와 인간 너머의 평화에 대한 이론적 자원들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 너머의 평화를 위해서 동물행동학에서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협동기반 동물행동학, 평화 생태학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될 필요가 있다. 다윈의 진화론 이후 경쟁이 동물의 본성으로 강조되었지만 한편에서는 공생을 강조하는 크로포트킨의 사상이 있었다. 동물행동학에서는 나치의 동물 행동학자로 알려진 콘라드 로렌츠(Konrad Lorenz)의 『공격성에 관하여』등을 비판하는 프란스 드 발(Frans de Waal)의 『영장류의 평화 만들기』등의 논의들이 있다. 최근 동물행동학 내에서도 동물 내의 협동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주목되며 진화론-공격성에 기반한 논의들과는 다른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동물행동학자이자 철학자인 뱅상 데스프레(Vinciane Despret)는 동물 내의 다양한 협동적 행위가 있는데 경쟁이 증시된 것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의들은 실증적인 생태학 연구로도 이어져 평화생태학의 영역이 생태학 안에서 형성된다. 이 분야는 인간의 활동, 전쟁, 폭력 등이 동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동물 내의 평화구축 행동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동물행동학적 연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동과 공생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낭만적인 서사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실험, 혹은 동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경쟁, 적대의 패러다임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구갑우: 평화 개념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는 항상 평화 ‘들’로 존재해 왔다. 개념사의 지평을 연 코젤렉(R. Koselleck)이 주도한 『개념사 사전』의 5권으로 한국에서 출간된 『평화』는 게르만의 평화(독일어 Friede) 개념이 “한편으로는 침해받지 않은 권리와 우정과 상호 애정의 상태를 뜻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 행위가 중지된 상태를 의미했다”고 시작한다(Janssen, W. 한상희 옮김. 2010. 『평화(Friede)』. 서울: 푸른역사). 이 두 의미의 평화는 “오직 법률 공동체 내에서만 가능했”다고 한다. 중국적 세계질서의 관념적 기반인 유학(儒學)에서도 평화는 각계각층의 화합과 재화의 공유가 이루어진 무사공평(無私公平)과 평등박애의 상태를 의미했고, 평화가 이상적으로 실현된 사례가 ‘대동(大同)’이었다(김석근. 2002. “한국 전통사상에서의 평화 관념.” 하영선 엮음.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국제정치학적 개념인 ‘수준’(levels)을 사용한다면, 근대 이전의 평화는 공동체 내부, 즉 국가란 표현을 사용한다면 국가 안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이었다. 국내적 수준에서 출발한 평화의 개념은 이후 국가 밖의 세계, 즉 국제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출신의 평화연구자 갈통(J. Galtung)과 그의 동료들은 평화를 “공감, 비폭력, 창조성을 가지고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Galtung, J., Jacobsen, C., and Brand-Jacobsen, K. 2000.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London: Pluto Press). 행위자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평화의

정의다. 인간이 평화교육을 통해 이 능력을 가진 행위자로 진화할지는 의문이지만, 해야 하는 일이다. 다른 한편, 국제적 수준에서는 전쟁이 없는 상태의 안정화 또는 지속가능성에 주목한다. 행위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평화협정과 같은 제도가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평화에 대한 실체가 이루어지곤 한다. 국제적 수준에서 평화 만들기와 관련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가 국가만을 국제 세계의 주요한 단일 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주류가 ‘비국가(non-state) 행위자’로 부르는 시민사회나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조될 때, 평화를 힘의 균형 또는 힘의 우위에서 찾는 한계적 사고를 넘을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국제적 수준에서도 국내적 수준에서처럼 평화와 정의가 함께 가는 구상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힘이 곧 정의라는 생각이 보수와 진보를 가로지르며 수용되곤 하는 곳이 국제 세계다.

평화를 갈등의 전환 과정이라고 할 때, 갈등을 유발하는 모순 ‘들’ 가운데 어느 것을 주요모순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평화 개념과 평화에 이르는 길이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적 수준에서 갈등하는 타자와의 관계는 다양한 담론들인 주의들(isms), 예를 들어 자본주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생태주의, 탈식민주의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타자가 자기의 존재 이유일 수 있지만, 타자는 평화롭게 공존해야 하는 대상일 수도 아니면 제거해야 할 지옥일 수도 있다. 각 관점들(perspectives)마다 정의(justice)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정의로운 평화의 모습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관계론적 존재론은 정의를 배제한 평화만을 고려하게 할 수도 있다. 가장 이기적인 행위자들로 간주되는 국가들의 관계에서 정의로운 평화라는 문제설정이 국내적 수준보다 어려운 이유다. 그럼에도 국제적 수준에서 힘의 정치와 자본의 전제를 제어하는 길이 평화 만들기라고 한다면, 그 담론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이다.

조영철: 이 질문을 받고서 ‘평화 다원주의’에 대해 찾아보았다. 평화학자 이찬수의 2016년 논문 「평화 개념의 해체와 재구성: 평화다원주의의 정립을 위하여」에 따르면, “평화다원주의는 평화의 개념, 이유, 이해 등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다양성들 간 조화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태도다. 평화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이되, 여러 ‘평화들’이 ‘평화’라는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

는 입장이다”(17쪽)라고 정의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공감의 되고 진실보한 평화접근법이다. 무엇보다도 “평화는 술어다”(22쪽), “평화는 폭력을 줄이는 과정”(32쪽)이라는 표현이 크게 다가왔다.

하지만 평화 다원주의의 메타이론(meta-theory)적 전제 및 실천가능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궁금증이 있다. 평화 다원주의는 다원주의적이지만, 무작정 상대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평화들을 긍정하며 이들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서 서로 대화하고 합의해 나가야 함을 주장한다. 규범적 입장에서 평화 인식의 다양성을 긍정하면서 다양한 인식들 간의 공감대를 찾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화하고, 공감대를 찾고, 합의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은 타당하고 이해가 된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다양한 평화들 간의 대화 시에 어떤/누구의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느냐’다. 다시 말해 대화와 소통의 관여규칙(rules of engagement) 또는 문법(grammar)은 무엇이며,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지배적인 문법이 있다면 그것은 중립적이고 모두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문법인가? 평화 다원주의에서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에서의 합의를 언급했는데, 하버마스의 소통이론은 이미 서구 근대성-합리적 이성-이라는 대본(script) 위에서의 합의를 말한다. 서구 근대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화 이전에 이미 배제되어 버리는 것이다. 서구의 근대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합리적 이성이라는 선이해가 없는 아마존 원주민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문법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 동일한 문법을 공유한 사람들 간의 대화와 토론은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와 토론이라 하기 어렵고, 자기 공동체의 문법만을 집단적으로 재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평화 다원주의는 대화 이전에 평화들 간의 선행된 공통 지점과 합의가 가능함을 전제한다. 즉 대화 혹은 조우를 해보기도 전에 이미 ‘평화들 간의 공약성이 있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공약 불가한 평화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화하고 합의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든다. 이슬람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조차 하나의 평화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평화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인종차별주의의 정당화, 젠더적 혐오 등은 배제되어야 하지 않나?

백지은: 술한 저항적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질성과 위계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타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근대의 규범체제를

살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 타자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중에서도 ‘국민’이라는 동일성의 원리에 서 있는 근대 국민국가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다. 외부에 대한 폭력은 물론 내부 성원에 대한 폭력조차도 국가이성 앞에 정당화되는 사례를 우리는 직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해왔다. 국가 이익을 다른 모든 가치에 앞세우는 규범 체계의 자명성을 돌아보지 않는 한, 평화를 논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좁다. 국가는 개인이 귀속한 여러 층위의 집단 중의 하나이다. 복수의 층위에서의 다양한 선(善)들이 서로 충돌할 때, 국가이성을 유일하고 절대적 준거로 삼는 인습적 통념을 문제화하지 않는다면, 전쟁과 폭력은 언제나 평화의 이름을 걸고 우리 앞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평화학은 근원적으로 근대의 규범질서와 가치체계의 자명성에 대한 회의와 반성을 필요로 하는 사유체계이다. 나아가 그것은 그러한 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실존을 근저에서 흔들 것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주의적 평화론을 넘어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평화의 새로운 과제라기보다 평화학 본연의 소임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근대 규범질서의 자명성을 의심하는 사유의 여정은 필연적으로 젠더, 생태주의, 탈식민주의, 트랜스내셔널리즘, 로컬과 일상에 대한 관심 등, 근대의 구심력을 해체하거나 완화하려는 다양한 탈근대적 기획과의 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평화 다원주의’라는 개념이 지금에 와서 의제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뒤집어보면 이제까지의 평화학 담론이 상당히 규범적 틀 안에 머물러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평화학이 체계적으로 발달한 서구 유럽에 비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지난 수십년 서구보다 더한 폭력과 분쟁을 겪었음에도) 평화학이 학문체계로 자리잡지 못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범박하게 보아 현재 한국에서의 평화 담론은 두 갈래로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정치나 외교안보의 하위 범주나 파생 범주로서 평화학이 하나라면, 운동과 실천, 사상의 차원에서의 평화론이 있다. 한국과 아시아에서 평화학이 깊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전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우리의 삶과 실천의 궤적 속에 흩어져 있는 후자의 언어들을 평화학이라는 범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 아닐까? 사실 1989년의 ‘한살림 선언’이나 1991년 『녹색평론』의 창간 선언을 보면 환경과 생태를 포함하여 지금 제기되는 탈근대적 평화의 개념

들이 이미 깊게 사고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인간과 사물, 자연을 포함하여 타자와의 관계와 연대를 강조하는 ‘생명공동체’나 ‘생명사상’ 등은 탈근대적 평화학이라는 의제에 여전히 매우 의미심장한 화두이다.

오키나와에 가면 학자들이나 운동가들에게 종종 듣는 말 중 “생명이야말로 보물(命こそ宝)”이라는 구절이 있다. 평화란 근원적으로 살아 있는 것의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이 말에는 반전(反戰)과 비폭력은 물론 인권, 동물권, 생태를 포함하는 평화 사유를 위한 자원들로 가득하다. 평화 다원주의를 위해서는 자유주의 평화라는 규범화된 평화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넘어 우리의 삶의 경험과 실천의 장소에서 뿌리내린 사유의 씨앗들을 학문적 언어로, 담론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 바깥에서 축적된 평화의 사유 및 실천과 대화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동기: 마지막으로 그 동안 평화연구를 하면서 접한 도서나 논문 등의 텍스트들 중 평화(연구)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추천하고픈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이 평화연구나 이해에 어떤 자극을 주었는지 말해 달라. 아울러 평화와 관련된 소설이나 시, 영화나 박물관 전시들 중 독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것이 있다면 소개 부탁 드린다.

주윤희: 먼저 크리스 조단(Chris Jordan) 감독의 《알바트로스》를 추천한다. 하와이 미드웨이의 섬에서 알바트로스들이 인간의 해양폐기물에 의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관련 미술작품이다. 이 미술작품은 성곡미술관에서 전시된 적이 있다. 인간 소비문명의 산물인 플라스틱이 자연을 어떻게 처참하게 파괴하는지를 처연하게 보여준다. 알바트로스라는 새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인간 문명에 의해 파괴되어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우리에게 비가시화 되어 있는 수많은 영역에서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고 사라져 간다는 것을 각성할 수 있기에 ‘느린 폭력(slow violence)’, ‘느린 재난(slow disaster)’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다음으로 올가 토크르츠크(Olga Tokarczuk)의 소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도 권한다.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토크르츠크의 이 소설은 생태적 폭력에 대한 밀도 있는 생태 스릴러이다. 인간의 평화와 공동

체가 감추고 있는 폭력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보여준다. 그 책은 생태적 폭력의 은폐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게 한다.

마지막으로 드니 빌뇌브(Denis Villeneuve) 감독의 영화 《둔》과 《컨택트》를 추천한다. 《둔》은 원작이 SF소설인데 최근 다시 영화화 되었다. 원작은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에 영향을 받아 쓰여진 소설로 생태파괴, 제국과 원주민들 간의 갈등, 전쟁과 평화의 과정이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삶이 제국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고 부정되는지가 SF로 잘 서술되어 있다. 자원 채굴과 지나친 개발로 인해 점점 황폐화되어가는 행성에서 또 다른 생명의 가능성, 이질적 생명체와의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영화이다.

같은 감독의 초기작인 《컨택트》에서는 이질적 생명체와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계 생명체와 소통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나온다. 언어 게임에는 일종의 근본적인 규칙이 있다. 그것이 적대와 경쟁에 기반한 게임의 언어라면 제로섬 게임이 될 테지만, 여기서는 논제로섬 게임의 언어 규칙을 찾아내는 과학자의 여정이 그려져 있다. 이 영화는 테드 창(Ted Chiang)의 SF소설에 기반한 것으로 논제로섬 게임에 입각한 언어 소통이 어떻게 가능한지의 과정을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다. 결국 이 영화는 적대나 경쟁과는 다른 방식의 언어 게임의 근본 규칙을 찾아내어 그것을 익히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컨택트》는 낯선 타자와의 조우가 적대와 전쟁으로 귀결될 것인지, 혹은 공존의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탐색이다.

이성용: 평화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무렵 내게 큰 도움이 된 책 두 권을 추천한다. 하나는 한나 아렌트(Hanna Arendt)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이다. 사실 읽기 쉽게 쓰인 책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히만이 자신의 과거 행적,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을 납치해 법정에서 세우는 과정과 관련해 펼치는 여러 논지들은 내게 정의와 책임의 복잡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다. 특히 전쟁이 끝난 후 각종 ‘이행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규범적 딜레마들을 이해하는 첫 출발점이 되었다.

다른 하나는 토니 보(Tony Vaux)의 *The Selfish Altruist: Relief Work in*

Famine and War)(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떠오른다. 옥스팜의 긴급구호 현장 활동가로 오랫동안 일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크게 여덟 가지의 주제로 고찰하는 책이다. 평화 활동과 관련한 여러 과제들이 이론적-성찰적 정리를 통해 명쾌히 정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현장 활동 사례들을 통해 그 문제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력하게 설명한다. 긴급구호 및 평화구축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현장에 발 담그기 전에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장원석, 김진호, 강경희 공역으로 번역본이 『옥스팜과 국제구호의 교훈』(온누리, 2005)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어 있다.

조영철: 나는 평화를 자아가 타자와 윤리적 관계성을 맺음과 동시에 자아가 자유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세 권의 책을 소개한다. 첫 번째 책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다. 원자론적 존재론에 기반한 근대성이 무비판적으로 극대화될 때, 폭력의 절정인 전체주의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아렌트는 우리에게 사유할 것과 정치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평화화이다.

두 번째 책은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소유냐 존재냐』이다. 프롬은 평화와 배척 관계에 있는 ‘소유적 실존양식’(현 정치경제 체제 하의 지배적인 삶의 양식)을 비판하면서 ‘존재론적 실존양식’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실존 구조에 맞게 성장을 가능케 하는 자유를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소유’하기가 아닌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중심주의와 아집을 버리고, 독립과 자유 그리고 비판적 이성을 지니면서 우리 자신을 행동의 주체로 체험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책은 강신주의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이다. 이 저작이 보여주는 장자는 우리가 속한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타자와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준다. 특히 장자의 타자 중심적 접근 방법은 자아와 타자 간의 윤리적 관계성 구축에 큰 함의를 주고 있다. 평화라는 용어에는 이미 자아와 타자 간의 얽힘과 관계 맺기가 전제되어 있다.

백지운: 오키나와의 시인 가와미쓰 신이치(川満信一)의 「류큐공화사회헌법C안(琉球共和社會憲法C私(試)案)」(1981)이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음한다.

우라소에(浦添)를 내세우는 자는 우라소에에 망하고 슈리(首里)를 내세우는 자는 슈리에 망한다. 피라미드에 오만한 자들은 피라미드에 망하고 장성(長城)을 자랑하는 자는 장성에 망한다. 군비를 뿜내는 자는 군비에 망하고 법을 내세우는 자는 법에 망한다. 신에 의거하는 자는 신에 망하고 인간에 의거하는 자는 인간에 망하며 사랑에 의거하는 자는 사랑에 망한다. (중략) 국가를 추구하면 국가의 감옥에 갇힌다. 집중되고 거대화한 국권 아래 착취와 압박과 살육과 불평등과 빈곤과 불안의 결과 전쟁이 일어난다. 석양에 물든 모래먼지의 고성(古城) 서역(西域)을, 새의 응시에 진압된 잉카의 도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아니, 우리들의 발은 지금도 초토 위에 있다.

가마미쓰 신이치, 「류큐공화사회헌법C안」 중

이 시는 1981년 오키나와의 문학잡지 『신오키나와분가쿠』 제48호의 특집 ‘공화국으로 가는 가교(共和国へのかけ橋)’에 실린 것이다. 1972년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는 역설적으로 오키나와의 저항운동의 사상적 한계를 드러냈다. 미군정에 대한 비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키나와의 저항운동에 ‘조국’에 대한 과잉된 환상을 심어주었고 복귀 이후에 찾아온 환멸은 류큐 독립국 건설이라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촉진하기도 했다. 조국 복귀와 독립국 건설 그 어느 쪽도 대안이 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여, 오키나와의 저항운동은 아포리아에 부딪혔다. 그 핵심은 국가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였다. 이 시는 근대 국민국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문제삼지 않고서는 오키나와의 생존을 추구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헌법’이 근대국가에서 지니는 제도적 상징성을 생각할 때 ‘공화사회헌법’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로 들린다. 그러나 시인은 바로 이러한 역설적 조합을 통해 ‘헌법’의 근원적 의미를 질의함으로써 일본 ‘평화헌법’의 의미를 재사고하도록 유도했다. 시인은 일본의 ‘평화헌법’에 담긴 비무장, 전쟁포기의 맹세를, 일본을 넘어 전인류에 보내는 숭고한 서약으로 승화시킨다. 여기에 이 시의 강력한 리얼리티가 숨겨져 있다. ‘평화헌법’의 근본정신을 되물음으로써 그것은 국가의 문제를 회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의 본령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 「류큐공화사회헌법C안」은 국민 하나하나가 망명자의 사상을 가질 때 헌법의 정신에 가장 육박할 수 있다는 이율배반적 진실을 보여준다.

평화 사유의 관점에서 「류큐공화사회헌법C안」의 중요한 지점은 오키나와의 특수한 경험에 뿌리내리고 있으면서 보편적 의제로서 평화의 본질적 문

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이 시가 오키나와 평화 사유의 근거를 이루는 원죄의식, 즉 오키나와가 전쟁과 국가 폭력의 희생자일뿐 아니라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전투 중 민간인 ‘집단자결’에 대한 반성, 전후(戰後) 오키나와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그리고 이라크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군이 수행하는 모든 전쟁의 전초기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은 오키나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대 세계의 구조적 폭력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원죄의식에 눈뜨게 했다. 그로 인해 오키나와의 평화 사유는 단순히 일본 국가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근대 국민국가체제의 욕망의 본질로 파고들으로써, 타자와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유의 장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이다.

구갑우: 책 두 권을 추천한다. 하나는 평화를 ‘계몽의 발명’이라고 생각한 칸트(I. Kant)의 『영원한 평화』다. 국가를 크기에 상관없이 도덕적 인격체로 만들고자 하는 불가능한 기획을 담고 있는 책이다. 평화에 이르는 길과 관련하여 우리가 한반도에서 실험했던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의 길, 제도를 건설하여 평화에 이르는 길, 공화정의 확산을 통한 평화의 길 등에 대한 원형적 구상이 담겨 있다. 다른 하나는 함석헌의 『평화운동을 일으키자』다. 한반도에서 통일이 평화와 등치되던 시절, 비폭력 평화주의를 지향했던 선구적 글들의 모음이다. 함석헌은 비평화의 공간이었던 한반도에서 삶의 꿈틀거림인 평화운동을 당위와 의무로 규정하고자 했다.³⁾

3) 그 외 다음과 같은 문헌들도 추천한다: 구갑우. 2021.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한국과 국제정치』 37권 2호, 253-285; 김석근. 2002. “한국 전통사상에서의 평화 관념.” 하영선 엮음.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조효제. 2022.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파주: 창비; 하영선. 2009. “근대한국의 평화 개념 도입사.” 하영선 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파주: 창비; 함석헌. 2009. 『평화운동을 일으키자』. 파주: 한길사; Galtung, J., Jacobsen, C., and Brand-Jacobsen, K. 2000.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London: Pluto Press; Janssen, W. 한상희 옮김. 2010. 『평화(Friede)』. 서울: 푸른역사; Kant, I. 백종현 옮김. 2013. 『영원한 평화』. 서울: 아가넷; Tonge, J. 2014. *Comparative Peace Processes*. Cambridge: Polity.

구갑우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다. 전공분야는 평화연구와 북한연구, 국제정치경제다. 현재 “한반도 평화 개념의 분단사”를 연구하고 있다. 대표 저서: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후마니타스, 2007), 『국제관계학 비판: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후마니타스, 2008). 최근 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2021), “미국의 ‘한반도 담론’의 기원, 1910-1945년”(2022).

백지운은 중국문학과 동아시아 사상 전공자로서 인문학적 관점의 평화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近代性 담론을 통한 梁啟超 啓蒙思想의 재고찰」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다. 『창작과비평』, 『역사비평』, 『人間思想』, 『文化研究』, Inter-Asia Cultural Studies 등 국내외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동아시아 탈/냉전의 관점에서 평화연구의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 “민족문학, 제3세계, 동아시아 - 최원식의 동아시아론의 구조와 계보” (동방학지, 2020), “독백과 망각의 전쟁 - 중월전쟁과 아시아 냉전의 역설성” (중국현대문학, 2018) 등이 있다.

이성용은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국립평화분쟁연구소에서 부교수다. 분쟁해결, 3자 중재, 분쟁 후 재건, 평화구축의 탈자유주의 모델 등의 주제에 관해 6권의 저서-편저서 및 30여편의 논문-북챕터를 발표했다. 최근 저서로 *Everyday Reconciliation in Post-Khmer Rouge Cambodia* (Palgrave Macmillan, 2022), *Multi-level Reconciliation and Peacebuilding* (Kevin Clements과 공편, Routledge, 2021), *Local Ownership in Asian Peacebuilding* (Palgrave Macmillan, 2018) 등이 있다.

조영철은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로서, 햇볕정책과 관련된 구성주의적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비판지정학, 국제정치사회학 및 지식생산의 정치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2021년에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에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postcolonial South Korea”이라는 공저 논문을 게재했으며, 2022년에 〈Asian Perspective〉에서 “Middle power diplomacy knowledge production in South Korea: A critical interpretation”이라는 공저 논문이 출간될 예정이다.

주윤정은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다. 인권사회학, 소수자, 생태평화와 다중간 정의(multi-species justice)를 연구하며, 최근에는 ‘느린 재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직업권 형성을 법사회학적으로 다루었고, 이후 후속 연구를 모아 『보이지 않은 역사: 한국 시각장애인의 저항과 연대』(2020, 한국학술원 우수도서 선정)을 저술했다.